

地方化時代の 農村指導事業 活性化 方案

심 상 우

경기도 농촌진흥원장

Directions for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Localization Age

Sang Woo Shim

Gyeonggi Provincial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mmary

Localization trends in Korea and trade liberalization in the world are the important challenges to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and strategic directions in terms of system, organization, programs and consciousness would be necessary for adapting to the new circumstances. Some of the measures to improve and activat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 1) Modification of extension personnel appointment regulations to secure specialized extension agents by the provincial administrators and county directors at the provincial and county level rural extension services.
- 2) Flexibl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ounty level rural guidance offices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local areas.
- 3) Strengthening the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effective local extension services in terms of facility and manpower.
- 4) Expans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programs for women and urban people and quality inservice training for extension personnel.

I. 序 言

세계 경제구조의 개편으로 경제면에서 개방화되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의 사결정이 지방단위로 분권화 되었다.

지난 30년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미흡으로 농업분야의 성장의 둔화와 경쟁력의 약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동안 농촌지도사업은 벼농사기술을 혁신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하는데 기여하여 주곡의 자급을 달성하는 녹색혁명을 이룩하였다. 80년대에는 비닐농법의 개발로 4계절 연중 신선채소를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통한 계절성의 극복과, 어린모 재배 및 벼 직파재배등 경영의

합리화로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한편으로는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농민교육의 내실화로 농촌에 활력을 넣어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UR협상의 타결과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국제화로 농업분야는 충격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외의 여건변화속에서 우리농업과 농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개방과 시장경제사회,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적응을 해야 하고, 앞으로 변화될 농촌사회에서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을 경기도의 사례중심으로 대안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우리 農村의 實態와 農業與件의 變化

1. 우리농촌의 실상

1) UR협상 타결과 WTO 출범으로 농민의 불안의식 상존

기간작목인 「쌀」시장의 개방이 당면한 현실이므로 소규모 영농규모인 대부분의 농민은 농업이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 생각하며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 하고 있다.

2) 농촌생활 여건의 열악

농촌은 사회간접 자본의 투자미흡으로 교통, 상하수도, 교육, 문화, 의료 등에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3) 영농구조가 소농체제로 경쟁력이 취약

경지규모가 영세한 소농규모인 1.3ha 정도로 상업농화 되지 못하고 효율성과 경쟁력이 취약하다.

4)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우리나라의 농가인구 비율은 11.6%, 50세 이상 농업인구는 43.5% 수준이다.(94)

5) 농산물 가격수준이 높아 국제경쟁력이 낮다

쌀의 경우 미국산보다 5배이고 쇠고기는 3-4배의 고가로 경쟁력이 낮다.

6) 국민경제에 대한 농업비중의 격감

국민총생산(GNP) 대비 농어업의 비중은 7.1%(94) 수준이다.

2. 새로운 國內外 與件의 變化

1) 세계화와 WTO 체제 출범으로 농업과 농촌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다.

2) 고품질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소비 증가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식품소비구조가 고급화·다양화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농축산물의 소비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3) 저투입 환경보전형 농업의 관심 증대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의 관심제고와 그린라운드 문제가 대두되므로 저투입 안전농산물 및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4) 기술농업 여건의 조성

농업인구 감소로 기계화 영농과 가족노동 중심의 시설농업 발전으로 기술집약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한편 선진영농주를 중심으로 하여 외국농업의 신기술과 시설도입이 증가되고 수출농업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5) 생산성의 향상

재배기술의 발달, 신품종의 개발 보급, 유리온실 등 시설개선으로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의 생산력이 향상되고 노동생산성도 증가되는 경향이다.

6)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필요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중·단기와 미래지향적인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농촌지도사업을 보는 시각

1) 농민의 입장: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농민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여 주고 고락을 같이하는 가족과 같다고는 하지만, 한편 기술수준이 높은 전업농은 지도사의 기술수준이 낮고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대응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입장: 일선의 지방행정과

중복성이 있고 행정낭비(병해충 방제, 후계자의 육성 등)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시·군 농산 행정 분야에서는 농촌지도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태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농촌지도소의 기능에 기대를 하고 있다.

3)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유사업무에 대한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함을 하며 특히 농·축협과 지도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병충해 방제 업무와 객토사업, 보급종 종자공급 등의 업무가 농촌지도소로 이관되었으나, 농림수산부에서는 최근 지도직 공무원의 일부를 시·군 농정분야로 전환문제를 적극 검토한 바 있다.

4) 농업이의 정책입안자 및 지도자:농민과 농가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기구 및 인력은 기존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Ⅲ. 지방화에 따라 예상되는 농촌지도사업의 문제점

농촌지도사업의 문제점을 조직 및 제도, 예산 투자, 전문지도인력 확보, 농촌지도사업 추진 등 4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 조직 및 제도

1) 중앙은 감독과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 진흥원은 시·군에 다양한 기술지원 기능과 교육시설이 극히 취약하다. 그리고 시·군은 아직도 지역농업개발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

2) 도시화에 따라 농촌은 공동화되고 행정구역은 광역시와 도·농복합시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농촌지도조직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3) 시 지역의 농가호수, 경지면적은 크게 감소되고 있고, 아울러 시 농촌지도소의 지도대상도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다.

4) 시대의 흐름은 농업분야도 전문화의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시 농촌지도 상담소(8개소), 그리고 읍·면 농민상담소(151개소), 지구지도소(3개소)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현재도 기형적 모습으로 상존하고 있다. 오산, 안산, 과천, 하남 등 8개시는 경지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시 농촌지도상담소에 이웃 시·군지도소 소속 농촌지도사가 3~4명이 배치되어 있다. 소요예산은 농촌지도상담소 소재지의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편 시 농촌지도상담소(8개소)는 시 직제에도 없는 실정이다.

5) 주재지도사(15개소) 제도는 종합지도사업으로서 특수지역인 도서벽지 지역은 객관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제는 발전을 위해 재검토 되어야 한다.

6)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중앙은 지방조직의 지원기능이 취약하고, 지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지도사업 추진이 미흡하다.

7)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과 기능을 축소 조정할 경우와 유사기구와 농촌지도조직을 통폐합할 경우에 이에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농촌지도 조직은 행정속에 묻혀버리거나 부대사업수행 조직의 기능을 면하기 어렵다.

8) '97년 이후에는 중앙의 농촌진흥시책이 지방조직인 도 진흥원과 시·군 농촌지도소간에 연결고리가 단절되므로써 지방 농촌지도사업의 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

9) 우수지도 인력이 농정분야로 유출이 예상되고(예 : 농정기획계) 지도직 정원을 현상유지하며 재정자립도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하지 않을 경우에 대안이 어렵다.

10) 도 진흥원 계장은 직급이 국가 6급에서 지방 6급으로 격하되므로서 경기도의 경우, 도 공무원교육원 및 북부출장소의 계장 직급인 지방 5급에 비하여 불균형이 심화되고, 현 인사제도상 도 진흥원 계장은 국비 5급인 과장으로의 승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11)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에 따라서 지역농업발전은 지방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12) 지휘권 확립문제는 '97년 1월 1일 이후 도원 소속공무원은 도지사에게, 시·군 농촌지도소 소속공무원은 시장 군수에게 이양되므로, 농촌지도사업 본래의 성격이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와 전문성 확보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였을 경우에도 원장의 시·군 지휘 감독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군 농촌지도소장 임용

권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다고 할 경우에 문제점은 시장군수는 정당공천자가 대부분으로 정당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서 순수한 사회교육사업인 지도사업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될 것이다.

13) 도 진흥원의 인력은 경영, 전산 및 정보분야 수요와 시설장비 증가에 따른 운영요원이 부족하다. 시·군 농촌지도소는 지역농업개발센터화에 따른 시설장비의 확대에 비례하는 지원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시·군지도소의 과 및 계별 정원을 기계적으로 통일되게 규정하고 있어 지역농업의 작목별 면적 및 총 생산등 지역특성과 부합되지 못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14) 지도공무원 하위직의 사기는 침체되어 있으며 이는 직급제에서 단일 호봉제로 전환할 때의 호봉책정 기준의 불합리에 기인하였다. 한편 농촌지도소장 직급은 국가직 4급에서 지방직 4급으로 격하될 입장에 있고, 부군수는 지방직 4급에서 국가직 4급내지 3급으로 상향조정되는 불균형을 초래하였다<표 1>.

<표 1> 시·군 부시장, 부군수 직급 (경기도)

직 급	시·군수	시	군
2급 국가공무원 (이사관)	4	수원, 성남, 안양, 부천	
3급 국가공무원 (부이사관)	11	의정부, 광명, 안산, 고양, 평택, 남양주, 군포	화성, 파주, 이천, 용인
4급 국가공무원 (서기관)	16	동두천, 과천, 구리, 오산, 시흥, 의왕, 하남	양주, 여주,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안성, 김포

15) 지도직 공무원의 연령 및 경력현황을 보면<그림 1> 비교적 높은 연령자의 분포가 많은 경향이고, 경력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 조직의 활력화에 문제가 있다.

2. 예산 투자

중앙기관은 농촌진흥시책의 추진을 위한 지방농촌진흥기구인 도 농촌진흥원의 첨단 시험

연 령	30세 이하 10.3%	31~40세 35.8	41~50세 26.8	51~55세 14.5	56세 이상 12.6	
경 력	5년 이하 9.7%	6~10년 10.9	11~15년 19.7	16~20년 22.1	21~25년 12.8	26년 이상 24.8
학 력	고 졸 44.1%		전문대졸 13.4	대 졸 39.4	대학원졸 3.1	

〈그림 1〉 지도직 공무원 연령, 경력, 학력별 분포

연구시설과 기자재 확보등 기반조성사업비와 정보화시대에 필수장비인 전산장비 및 농민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였다.

시·군 농촌지도소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과학영농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며, 초고속 원격영농 지도 시스템 시설비 지원이 미약하다.

한편 도 진흥원은 시·군 농촌지도소에게도 정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도 역시 부족한 실정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3. 전문지도인력 확보

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방안이 취약하다. 신규 공개채용시 응시학력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기존의 지도사 보수교육 과정이 문제가 예상된다. 내무부는 지방행정연수원과 각 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도직 지방화에 따른 농업공무원 교육원의 전문지도인력 보수교육 방안이 미흡하다.

지도공무원의 중·장기 보수교육의 기회가 부족하여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는 품목별 전문지도인력 교육이 취약하며, 지도공무원의 해외연수기회도 전업농의 해외연수 수준에도 미달하는 경향이다.

4.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도사업은 지방행정기관의 시책사업과 차별

화 되어야 하나, 행정과 지도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수출생산단지 조성, 첨단유리온실 보급, 농기계 보관창고 보급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직파재배 파종기 보급사업 등은 동일한 단순지원 사업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식량증산기술 보급에 지도력을 집중시켜 온 결과로 우리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품질관리, 생산비절감 등 고급기술의 축적과 지도에 미흡하였고, 저장·가공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농가에 환원하는 기술지도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유망작목에 대한 종합적 기술체계 확립과 가격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지도노력이 미흡하였다.

농민의 기술수요가 소득증대기술에서 생활과학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목별 전문기술지도 체제와 능력이 부족하고, 농촌환경개선과 생활과학기술 보급이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IV.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 방안

지역농업 발전은 농촌진흥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방별로 Think Bank로써의 역할증대와 개혁차원에서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농정추진 체제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있는 자율농정 방식이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체제정비 등 지방화에 부응하고 국민소득 일만불 이상의 수준에 맞

게 정비되어야 한다.

1. 지도조직 및 제도개선

1) 지방화시대 여건에 맞는 중앙·도·시군의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행정조직과 조화를 유지하며 기능을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중앙은 현재까지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제중심의 감독체제에서 지방화에 따라 지방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질 가능성이 많다. 중앙에서 기반 정비 차원에서 경지정리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경우와 같이, 지방 농촌지도조직의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강화, 전문 지도인력의 교육훈련, 각종 정보지원 체제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전국에 지원가능한 새로운 영농기술, 지역 특화작목의 신품종 개발, 전산 및 경영정보 등 실질적 지원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 시험장 및 각 연구소의 연구 결과 및 지도사업 반영자료 지원체제도 보완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다.

도 진흥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목 기술 교육, 시·군 지원과 중앙 및 시·군과 협력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는 경영 및 전산업무 등 정보기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시·군은 현장애로 기술의 신속한 해결로 지역농업 개발의 중추기관으로 정착하여 현장애로 기술의 지속적인 발굴, 농민의 새기술과 기존기술과의 접목 지도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

2) 경기도의 경우 도·농 복합시가 고양, 남양주, 평택시가 있으며 '96년에 이천, 파주, 용인군이 도·농 복합시로 승격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서 지도조직도 발전적으로 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

3)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등 시 지역은 농업인구의 감소로 지도기능도 쇠퇴하고 있다. 이러

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광농업 육성, 아파트 배란다 원예, 텃밭가꾸기,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학습장 운영, 도시민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기술과 정보제공 등 지역특성을 살린 새로운 과제를 창출해야 지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

4) 시 농촌지도상담소의 소속과 예산집행 등 개선방안은 경지면적과 농가수 규모에 따라 시 농촌지도소를 증설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는 농촌지도사업을 이웃 시·군 농촌지도소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다.

각 읍·면별 농촌지도상담소(151개소)는 농민들의 사랑방 기능에서 탈피하여 시대 흐름인 전문화 추세에 맞게 품목별 지역특화작목 지도사업 부문으로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

한편 교통 및 통신이 발달되고 있으므로 지구지소(3개소)의 인력을 역시 품목별 전문지도사로 조정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5) 주재지도사(15명) 제도 역시 읍·면 상담소와 동일한 맥락에서 개선하여야 하는 과제이다.

6) 중앙은 시·군 농촌지도소에 보급이 확대될 초고속 원격영농기술지도 시스템의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을 하여야 한다.

지방은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농업 산학협동심의회, 품목별 전문생산조직체, 학습단체와 협력해서 자율지도사업 체계를 한차원 높게 강화해야 한다.

7) 만약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 지도소 또는 산업과 등 유사기구 통합을 예견해서 사전에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반 법규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중앙의 농촌진흥시책기관(시험장 및 연구소 포함)과 지방기관인 도 진흥원과 시·군 지도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므로 이에 따른 연결

고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9) 우수지도인력의 시·군청으로 유출방지 방안이 없고, 정원은 유지하되 결원보유를 극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10) 도 진흥원의 경우 계장은 국가직 6급에서 지방직 6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가직 5급인 과장으로서의 승진의 길이 막힘으로써 조직운영과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도 진흥원의 계장직급을 지방지도관으로 조정하여 도청 및 사업소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을 하여야 한다.

11)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증진으로 지방농업발전이 촉진되도록 농업인의 단합과 지방 농촌진흥기관장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1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되게 되면, 도 원장의 지휘감독기능과 전문성 유지방안이 없으므로, 임용권을 도 원장과 시·군 지도소장에게 위임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지휘체계와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다.

13) 주민으로부터 수요가 늘고 있는 전산 및 정보분야 인력과 시·군 지도소 시설장비 운영요원을 증원해야 하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지도소 교육시설 건축 등을 위한 건축직 공무원을 실정에 맞게 도 단위에 배치하여야 한다. 한편 도 진흥원 및 시·군의 정원은 총 정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권을 지방 농촌진흥기관장에게 부여하여 확실성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1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94.1.17)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행정직은 9급의 경우 8년 경과하면 8급으로, 8급에서 7급은 9년이면 자동승진되나, 지도직은 호봉만 승급되므로 단일호봉제 실시당시 8~9급들의 보수체계에

대한 불만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도사의 계급별 호봉환산표를 개정하여 연구직 수준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강임되는 지도소장의 대우문제는 적극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지도사의 호봉조정문제와 지도소장 직급문제는 조직의 활성화의 열쇠이고 사기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예산 투자

중앙에서 도 진흥원 예산 지원은 농촌진흥사업 시책추진에 필요한 첨단 시험연구시설 및 시험기기 확보 소요경비(중앙에서 경지정리 사업비를 지원하는 차원과 동일한 개념)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한편 도 진흥원에 첨단기술농업상설교육시설, 농경문화 교육시설과 장비, 수출농업지도에 따른 외국문헌정보, 농업기술 및 가격정보 확산을 위한 전산장비 지원이 요청된다. 시·군 농촌지도소에는 재정이 취약하므로 경영상담기능 강화를 위한 컴퓨터 지원과 PC 운영요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도 진흥원은 시·군 지도소의 도지사 역점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비와 사업비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시·군 농촌지도소는 시·군 특색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3. 전문지도인력 확보

중앙과 중앙은 품목별 전문지도사업 확보를 위해서 농촌진흥공무원 품목별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신설, 또는 기존 농업공무원 교육과정의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신규직원은 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일선에 배치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도사 중·장기교육은 시·군의 재정이 취약하므로 전액 국비 및 도비로 훈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하며,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대폭 확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지도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4.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도사업 방향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도대상은 전 농가 지도에서 품목별 농민조직 중심으로, 지도분야는 모든작목에서 지역특화작목 위주로, 농업소득 중심지도에서 농외소득 증대기술을 포함하여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기술까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하여야 농민에게 만족감을 주는 지도사업으로 발전을 하고 농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지도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화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발전시켜야 할 자율적 지도사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화

농촌지도소에 조사, 분석, 애로기술개발등 연구기능과 상담기능을 보강하여 작목별 전문 기술 지도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찾아와서 보고 배우는 교육장으로 만들어 지역농업개발의 선도와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한편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설장비 확보 준칙」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경영상담의 과학화로 농민만족형 지도사업 수행

농촌지도사업을 기술보급 중심에서 경영, 취업, 기술알선 등을 '94년 조사한 경영상담 자료에 기초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상담 기능을 강화해서 농가단위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3) 품목별 농민조직을 기술보급의 핵심체로 육성

현재 지역중심의 조직체인 농촌지도자회와 농민후계자회 등을 비롯한 모든 농가는 품목별로 조직화하여 생산량, 생산시기, 출하량 및

출하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품목별 전문 생산조직체로 육성하고 그 조직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95년 경기도에서 제정한 「농업전문경영인 및 품목별 조직체 육성기금 조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확산을 제안한다.

4)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으로 기술농업 실현

새기술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기관의 일반시책사업과 조화를 이루되 차별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채택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경기도의 예를 들면 규제가 심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오염이 적은 「환경보전형 버섯 우량배지 분양센터사업, 톱밥이용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급, 원예작물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 고능력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개발된 현장애로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한 농가실증 시범사업 등이라 할 수 있다.

5) 지역특화시범사업 확대로 지역개발 촉진

지역특화 유망작목 중심으로 하여 종합적인 기술투입과 권역별로 지역특산품을 육성하여 정착시켜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수출농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6) WTO와 관련된 직접보조 시범사업 추진

WTO 규정에 생산자에 대하여 직접보조가 허용되는 환경보전지원, 낙후지역보조, 휴경보상, 자연재해 구호, 탈농지원 등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 예로 천적을 이용하여 비료와 농약을 절감하는 저투입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보급,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기술보급 등으로 농업환경오염을 경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유기농산물은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으므로 가격차별화로 농가의 실질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는 잇점도 있다.

7) 농업전문인력의 육성

4-H회를 현재 학생 4-H회와 영농 4-H회로 구분하여 육성 지도하고 있으나,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맞는 도시형 4-H회와 농촌형 4-H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형 4-H회는 농업의 가치관, 전통농경문화, 민속놀이 및 전통예절 등의 보급에 관한 과제를 발굴 이수한다. 그리고 농촌형 4-H회는 품목별로 조직화하여 전문생산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질과 예비후계자로 능력을 갖추는 4-H회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있다.

그리고 농촌여성의 영농참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농업전문인력화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과정도 대폭 확충함이 커다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방이라는 세계적인 농업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을 현장과 실증위주로 강화하여야 한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중앙, 도, 시·군의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상설교육장화 하고 강사요원 양성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전문 기술지원단의 현장지원을 확대한다.

8) 농촌생활 과학기술 보급으로 삶의 질 향상

농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농참여, 주거환경개선, 일감 갖기 등 다양한 역할수행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양질의 생활과학기술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형 농촌지도사업은 도시민과 함께하는 지도과제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농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개선 과제를 보급해야 한다.

9) 지역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육성

시·군 자율농정시책에 맞게 지역실정에 부합되고 농민의 요구에 의한 현장필요기술 개발보급, 지역농업발전 협의, Think Bank로서의 기능보완을 위해 「지역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

영을 대폭 강화하며, 농민의 생산자단체와 지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일층 강화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V. 結 言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생산력 증대와 국가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며, 한국은 연구·지도가 결합된 효율적인 농촌진흥 조직체제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국가중의 하나이다. 국경이 없어지고 열려있는 지구촌의 급변하는 농업여건과 지도환경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방자치체 실시에 따른 제도·조직·사업·의식구조의 획기적인 개선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UR 협상타결에서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지도사업은 오랜기간 식량자급을 위한 증산기술 보급중심의 지도활동을 주축으로 한 타성에서 발생하는 내부갈등과 WTO 체제에 따른 경쟁력 강화등 외부압력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녹색혁명을 성취하였던 저력을 바탕으로 하여 새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본격적인 지방화에 따라 이제 과감하게 개선할 부문은 개선하고 밝은 측면은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 새로운 과제의 발굴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일선 지도공무원들이 지방직화 되더라도 일체의 불이익이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농촌을 위하여 앞으로 펼쳐지는 농민중심의 자율농정을 주도하는 지도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와 역량을 결집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농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VI. 建 議

○ 지방 농촌지도직 공무원 임용권 위임

- 지방단체장의 임용권을 도 원장과 시·군 소장에게 위임하여 전문성과 지휘체계 확립

○ 품목별 전문화에 맞는 시·군 지도소 조직 정비

- 시·농촌지도상담소, 읍·면 농민상담소, 지구지도소, 주재지도사 제도 검토 보완

○ 융통성 있는 시·군 지도소 정원 총정원제도 도입

- 과별 총 정원제 도입

○ 도 진흥원 계장급을 지방 농촌지도관으로 임용

- 계장급을 지방 농촌지도관으로 임용하여 도 본청 및 타 외청기관과의 균형 유지

○ 국가직과 지방직간의 인사 임용

- 특별채용시험 면제, 승진후보자 명부를 도 단위에서 작성

○ 지방 농촌지도기관 기반조성 지원

- 도·진흥원과 시·군 단위(지역농업개발센터) 기반조성비등 지원 강화

- 초고속 원격영농기술지도 시스템 시설 확충

- 상담자료 및 전산프로그램 집중 개발 지원

○ 지도공무원 지방직 전환후 중앙단위 전문교육 훈련 실시

- 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육제도와 유사한 기구설치 또는 농업공무원 교육원 품목별 전문교육과정 확대

○ 여성 농업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강화

- 여성인력 농업전문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도·농 복합형 또는 도시형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도과제 개발

- 여건변화에 맞는 특수사업등 새로운 지도영역 발굴 지원

- 배란다 원예등 도시민 기호에 맞고 농민과 함께하는 과제 개발

Ⅶ. 참고문헌

1. 김동희외 2, 1991.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변혁기 농촌지도사업 발전 전략).
2. 한국농촌지도학회, 1994. 한국농업과학협회 학술토론회 논문집.
3. 우리농업 살리기 토론회, 1994. 한국농업과학협회 학술토론회 논문집.
4. 제2회 관광농업 개발 국제토론회, 1995. 지방화시대의 관광을 통한 농어촌 활성화 전략.
5. 농어촌진흥공사, 1995. 농어촌진흥(통권 108호).
6. 한국농업 50년의 회고와 전망, 1995. 광복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7. 김일철, 1994. 일본농촌과 지역활성화 운동. 나남출판.
8. 21세기 위원회, 1992. 2000년의 한국과 세계. 동아일보.
9. 지방자치실무연구소, 1994. 한국의 지방자치. 의암출판.
10. 임사빈, 1994. 21세기를 잡아라. 김영사.
11. 田島中雄외 1, 1994. 세계의 농업 보급사업.
12. 한두봉, 김병률, 1992.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방화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발전 방향

金英輝

제주도 농촌진흥원 지도국장

지방화에 따른 도 농촌진흥원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는 도 단위 연구, 지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기술과 정보를 가공 조립하여 시·군 농촌지도소를 지원하고 또한 중앙과 시·군 농촌지도소간의 교량 역할이 지방화 이후에 보다 더 강화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도 농촌진흥원 지도국의 하부조직 및 정원이 기구설치 요건에 못미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의 기구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도공무원들은 1997년 지방직화 이후의 조직변동에 불안을 느끼고 있고 지방직화 이전 기구 설치의 일반 요건에 맞도록 도 농촌진흥원의 하부 조직 및 정원 조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촌지도사업 강화를 위한 도 농촌진흥원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살펴볼 때, 먼저 중앙 - 도 - 시·군 농촌지도소와의 연계강화를 위한 체계를 살펴봄이 필요하고, 이와 아울러 우리 제주도와 관련된 주요내용으로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 중앙 - 도 - 시·군간의 업무 기능

1. 지방직화에 따른 도 단위 기관의 4가지 기능 변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에 관한 논문(鄭世煜)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도 단위 기관은 광역 행정기능, 보완·대행하는 기능, 연락과 조정기능 및 지휘와 감독 기능을 담당하

는 역할인 바, 지금까지는 지휘감독>연락·조정기능>보완, 대행기능>광역행정 기능의 순으로 그 업무가 행해져 왔는데, 앞으로는 지방화가 진전되고 지방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지도, 감독 및 연락, 조정 기능은 더욱 감소하고, 주로 담당해야 할 기능은 보완, 대행기능과 광역적 업무의 기능인데 이 두 기능을 수행하는 한도내에서만 도 단위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농촌 지도기관의 기능도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농진청 - 도 농촌진흥원 - 시·군 농촌지도소의 역할 재정립

농촌진흥청, 도 농촌진흥원 및 시·군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살펴보자.

농촌진흥청은 농림수산부의 외청인 중앙단위 농업시험연구 및 지도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업무 즉, 농업생명공학, 농화학적 연구등 기초적이며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를 하고, 국내외의 정보 생산수집 및 보급등 전국적 적용 가능한 기술의 연구 보급과 국민의 식량을 안보적 차원에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을 대비한 북한농업 연구까지도 담당하는 거국적, 미래지향적 농업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 농촌진흥원은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그 지방에 필요한 광역적인 실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내의 특산품 개발 보급이라든가,

도 나름대로의 고급 농업기술정보센터화를 기하여 농촌사회 및 농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연구 개발하여 시·군에 좀 더 많이 지원해줌은 물론 권고와 조정 기능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제는 지방화,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교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그 지방의 환경과 비슷한 외국의 농업기술 정보습득을 위해서 외국과의 공동 연구 체제의 확립이라든가 수출상담 등 국제 교류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도의 예를 들면 기후 조건과 위도가 비슷한 일본 지역의 새기술 및 정보의 직접적 도입은 제주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일본을 자주 왕래 하면서 새기술을 습득하고, 또 연구·지도사를 1년이상 장기 파견하고 있고,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주에 기술을 전파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도 단위는 심층적인 시험 연구로 그 결과를 농촌지도소에 알려주고 또 농업인 교육 기능도 보다 강화하여 도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는 농업인 스스로가 수강료를 내면서라도 교육을 요청할 정도까지 질적인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연구, 지도직공무원의 기획, 정보, 국제교류 등 전문기술자로서의 기능강화 등 전문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며 또 장기간을 요하게 되는 맹점도 있다 하겠다.

한편, 농촌지도소도 이제는 지도 방법을 달리 하여 농민을 찾아 다니면서 지도를 해야 할 시기는 지났다. 필요한 사람이 찾아와서 배우고 갈 수 있는 체제로 나가야 할 것인데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 연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 제주 농업과 농촌진흥원의 역할

1. 제주농업의 입지 조건과 특징

제주도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31%)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에 의하여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총 8조2천144억원을 투자하면서 이중 30%인 2조4천7백억원을 1차 산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투자로 인한 제주 농업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본다.

제주의 농업은 자연적, 경제적인 입지조건으로 볼 때 도민의 생존이 걸려있고 지역경제의 중추산업으로서 『농업을 대체할 타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농업을 절대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는게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난관이 있는 데에도 개방화에 따른 경쟁체제로의 전환문제, 영세경영 규모와 농업인구의 유출, 멀리떨어진 섬으로서의 유통상의 취약점, 농의소득원의 취약, 감귤위주의 소득의존 등이 구조적 취약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수입개방에 따른 본 도의 농업생산 감소피해액은 총 10,805억원으로 전국 피해액의 14%를 점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 기온이 따뜻하고, 특히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길어 감귤, 참다래 등 난지 과수 재배가 용이하고 육지부와 경합되지 않는 월동채소나 시설채소, 시설화훼 등 청정·고급 농산물 생산이 유리하며, 토양역시 육지부와 다른 화산회토로 물리성이 좋고 배수가 잘되고 보수력이 좋아 감자, 마늘, 양파 등 뿌리작물 생산에 적합하고 제주 특유의 특산자원 식물이 많아 개발가능성이 무한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간 614억달러어치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거대한 일본시장이 이웃해 있어 수출 농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도 높다. 뿐만아니라 영농의 주체인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이 대단히 높고, 기술수준 또한 상당한 수준이며, 특히 농촌의 젊은층 즉, 농업종사자중 20~50세 미만의 젊은 영농주가 30%나 차지하고 있어 제주 농업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2. 제주도 농촌진흥원의 역할과 성과

이와 같이 제주특유의 입지적, 사회적 인적 특징으로 인하여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도 특색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전개하고 있다. 몇가지 주요 사업을 간단히 소개하면, 무엇보다도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은 제주 경제를 살리는 자주 산업으로 「생과로 승부」를 걸고 있다. 60년대 초부터 소득작목으로 육성 발전 시키면서 지금까지는 양산체제로 가던 것을 이제는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적정생산과 품질고급화로 성공하고 있다. 그 예로 지난해 격년결과로 인해 올해는 과거와 같은 대풍작(70만톤)이 예상되었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간벌, 꽃따기, 전정, 일매숙기등으로 60만톤 내외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품질을 고급화 시킴으로써 높은 값을 받고 있는 현실정이다.

감자는 감귤 다음가는 제2의 소득작물로 대두되면서 면적이 점차 증가하여 1만ha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런데 무병우랑씨감자 부족에서오는 생산성 저하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감자기술센터」를 설치하여 씨감자 자급 생산을 위한 집중 연구에 들어갔다. 내년에도 이를 위하여 8억원을 이미 확보하여 집중 생산할 준비에 들어 갔으며, '98년 부터는 전면적 종자 공급이 가능하여 제주 지역 소득자원화에 일조를 하게 된다.

또 원산지 보다 더 좋은 품질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참다래 무가온 비가림 재배는 소득을 3배 이상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선인장 가공기술 개발 등 현장 애로 기술개발 보급과 채소류의 양액재배로 수출단지 육성, 채소류 공정육묘시스템 개발, 장미 겨울절화생산 품종개발(티네케등 6종), 여름국화축성재배 품종 선발, 한란 신품종 육성, 수출용 양란 작형 및 우량 품종 선발, 총채벌레 방제체계 연구 및 감귤원 다목적 자동방제시설 등 팔목할 만한 연구와 지도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이러한 일련의 요인들은 농림수산부 출신인 신 구범 제주도시사의 적극적인 뒷받

침이 있었음도 첨언한다.

그리고 이제는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하던 종묘 생산 업무가 농촌진흥기관으로 이관되어 본격적인 종묘 생산을 하게 됨에 따라 도 농진원을 비롯 시·군 농촌지도소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화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농촌진흥원 업무의 발전 방향과 구상

앞으로 도 농촌진흥원은 이와 같은 기능 이외에도 더 많은 사업을 위해서 역할분담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원의 예를 들어 몇가지만 설명 하자면,

첫째, 시험연구 사업에 있어서는 시·군 농촌지도소에도 그 기능을 부여하여 품종 비교 시험이라든가 생산성 제고, 지역적응 및 품질향상 시험등 실증적 단순 시험은 시·군 농촌지도소가 수행하고, 도 농촌진흥원은 시·군 농촌지도소가 해결 못하는 품종문제라든가 토양, 시설영농 등 한차원 높은 시험연구를 할 계획이다.

둘째, 또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 각자에 대한 자질향상을 기함은 물론, 앞으로 신규채용때에도 지역별 특채를 실시하여 그 지역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화에 대응함은 물론 연구사는 박사, 지도사는 석사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을 채용하여 명실공히 첨단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하겠다.

또, 외국의 새로운 기술, 정보를 수집 보급하기 위해 외국어 교육도 더욱 강화하고 단기적인 외국 연수보다는 장기 외국연수를 실시토록 하여 깊은 학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1년동안 장기연수는 매해 1~2명씩을 일본에 파견 연수시켜 지금까지 4명이 귀국하여 본격적인 연구·지도를 하고 있으며 그의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영어, 일어) 교육도 계속 실시중이다.

셋째, 제주도의 자원 식물인 섬오갈피의 가공 사업을 더욱 개발하여 이를 기업화 할 계획이

며, 또 200억톤이나 매장되어 있는 제주 송이(Scoria)를 양액재배용 배지로 개발함은 물론, 액정유리화면등 정밀가공 연마제, 바이오제품 및 다용도의 건설자재로의 개발도 연구중이다.

넷째, 제주는 해안선을 따라 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산간은 목야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모지로 방치되고 있어 이를 도차원에서 기반을 정비해서 첨단 양액재배단지로 육성하는 것도 구상중이다.

다섯째, 제주는 특히 읍면별로 농업의 주산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품목별 조직도 활발한데(24품목 62조직 구성되었으며 계속 확대 조직중)이를 더욱 육성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갖는 품목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겠다.

여섯째, 이러한 일련의 연구·지도사업을 위해 현재 계·과 단위의 조직을 현실에 알맞게 운영하기 위해 시설농업연구팀, 유기농업연구팀등 팀(Team)제의 조직운영도 실시할 계획이다.

■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

도 농촌진흥원과 시·군 농촌지도소를 종전에는 도 및 시·군(지방자치단체)이 아닌 도지사, 시장·군수 소속으로 두어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특별 행정기관으로 간주하여 일선에서 비교적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으나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 농촌진흥기구를 도 및 시·군의 직속기관으로 함으로써 이제는 도와 시·군의 직속기관이 되었으며 1997년부터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화로 인한 우리의 위상에도 변화가 올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화가 될 때에는 농촌 지도사로 보한 도 단위 계장급은 현재 도 직속 기관인 공무원교육원의 계장도 지방직 사무관(5급)인 바, 도 농촌진흥원의 계장도 지방직 연구관·지도관으로 격상시켜 도 지방행정조직과 격을 같게 해야 한다.

둘째, 지금의 체제로는 연구직 공무원은 중앙과 도 이외에는 교류할 곳이 없다. 시·군 농촌지도소에도 연구직이 순환 전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직, 농업연구직의 직급을 복수직으로 해서 연구·지도사들이 현장감있는 연구지도를 기함은 물론 인사의 원활한 효율성을 부여하는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셋째, 지금 지방의 일선 연구·지도직 공무원들은 지방직화에 따른 불안감에 놓여 있다. 지방직화에서 오는 득실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충실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넷째, 지도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는 우수한 연구직 충원을 위해서 외부에서 신규 채용을 하거나 전직으로 충원을 하였다. 그런데 그나마 지도직에서 장기훈련을 이수했다든가 자질이 좀 우수한 지도사는 종종 연구직으로 충원(전직)되기 때문에 지도직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만 처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것 또한 지도직 전문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끝으로 더 나아가서 장기적 안목에서 중앙은 중앙대로 도는 도 나름대로의 연구 지도사업이 달라져야 할 것인 바, 이것 또한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